

(전매채) 2018년 12월 20일(목) 10: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보 도 자 료

www.mss.go.kr

·문의 :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조재연	과장(042-481-4408),	김윤우	서기관(3957),	강신천	사무관(4565)
	기재부	산업경제과	이상윤	과장(044-215-4530),	오성태	사무관(4533)		
		서비스경제과	김영노	과장(044-215-4610),	이우형	서기관(4611)		
	교육부	기획담당관	김영진	과장(044-203-6636),	전보애	사무관(605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태석	심의관(02-2110-3178),	이경민	검 사(3503)		
	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	이희준	과장(02-2100-3890),	이두원	사무관(3898)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이경직	과장(044-203-3241),	서문형철	서기관(3245)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이재식	과장(044-201-2151),	도경록	사무관(2157)		
	산업부	유통물류과	서기웅	과장(044-203-4380),	허정민	사무관(4381)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장재원	과장(044-202-2840),	이태호	사무관(2847)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	김부희	과장(044-202-7210),	김정택	사무관(7215)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	박건수	과장(044-201-3797),	박동감	사무관(3812)		
	해수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권준영	단장(044-200-6170),	정준호	서기관(6048)		
	공정위	가맹거래과	이순미	과장(044-200-4932),	박현규	사무관(4934)		
	금융위	금융정책과	신진창	과장(02-2100-2830),	김경호	사무관(2836)		
	인사처	연금복지과	연난희	팀장(044-201-8408),	김인경	사무관(8423)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오정완	과장(043-719-2851),	강승극	사무관(2854)		

##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발표

### -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중장기 정책로드맵 수립 -

☐ 자영업 협·단체로 구성된 민간 TF를 통해 정책과제 공동 발굴

☐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8대 핵심 정책과제

- ①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 온누리상품권 10조원)
- ②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10곳 신설
- ③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 ④ 0%대 수수료를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
- 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 ⑥ 부실채권 0.9조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
- ⑦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  
\* 4대보험 지원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노란우산공제 180만명 가입자 확보
- ⑧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 당·정협의를 통해 자영업 협·단체가 함께 대책을 발표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및 주요 자영업 협·단체는 '18.12.20(목) 07:30, 당·정·업계 협의를 개최하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당·정·업계 협의 개요 >

- 일시·장소 : '18.12.20(목) 07:30~08:3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참석자
  - (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등
  - (정) 홍종학 중기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등
  - (업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방기홍 중소기업자영업자총연합회장, 조중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이호준 전국편의점살리기네트워크위원장

- 이번 대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했다.
  - 자영업자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 취업자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처음으로 설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 취업자(2,673만명) 중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중 25.4%(679만명)
- 둘째,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대책이다.
  -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 수립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해 자영업 협·단체 및 정부로 구성된 '현장소통 TF'를 운영\*(9.19~10.23)하고, 5차례의 심층토론을 통해 대책을 만들었다.
  - \* 운영방식 : 협·단체별 정책과제 및 애로사항 제안 → TF 토론 → 소관부처 검토 → 검토 결과에 대해 TF 토론 → 정책과제 반영
- 셋째,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에 초점을 둔 종합대책이다.
  -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하였다.

○ 넷째, 장기적 시야의 중장기 정책로드맵이다.

- 장기적 시야에서 창업·성장·재기의 생애주기별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자영업 정책기조 전환 >

기 존	개 선
현장애로 해소	혁신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및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강화
경영비용 절감	비용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리는 정책 발굴에 초점
과밀해소를 위한 창업지원 축소	⇒ 준비된 창업 및 재기 지원 강화
대기업 진입 억제 및 시장 보호 중심	상생협력 성공사례 확산 및 생계형 업종 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자영업자 안전망 확충과 함께 복지와 삶의 질도 고려
정책의 부재	자영업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 정책영역 규정 및 연구기능 등 정책인프라 구축

□ 당·정·업계는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에 지속 반영하되, 자생력 있는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 ① 혁신 지원을 통한 성장 역량 강화 ②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③ 준비된 창업 및 원활한 재기 지원 ④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확산 ⑤ 안전망과 복지 확충 ⑥ 자영업 정책영역 정립 및 정책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방향에 합의했다.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영업 성장 역량 강화

- '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등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연계하여 상권활성화 효과 배가

- 스마트 제조혁신, 공동 작업, 전시 판매 등을 위해 '소공인 복합 지원 센터' 10곳 설치 및 특례보증 신설(기보, 기업당 최대 5억원)
- 혁신형 소상공인(소상인 : 백년가게, 소공인 : 명문소공인 등) 1.5만명을 발굴·육성하여 성공 모델화하고 자금·컨설팅·마케팅 등을 연계지원
  - 소상공인 등의 자동화설비 구축에 정책자금(2,000억원) 우대 지원
-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협업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전국화·규모화 촉진(조합원 20인 이상 협동조합 : '18, 30 → '22, 150개)
- 공영홈쇼핑 입점(소상공인 특화 방송코너 신설), 1인 방송플랫폼 구축(크리에이터 랩), 해외진출(자영업 수출컨소시엄 사업 도입) 등 판로 지원
- 미용업(뷰티산업법 제정 추진), 외식업(복합매장 요건 완화) 등 생활밀착형 영세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업종별 규제완화·지원

## ②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 '19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2년까지 총 10조원 발행
-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하여 0%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예, 5%)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하여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가칭)'국민포인트제' 도입
-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매년 1.5조원 내외로 확대하고,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6천억원(은행권 사회공헌기금 활용) 및 저신용자 전용 정책자금 신설(100억원)

## ③ 창업 전 체계적 교육과 폐업·재기 일괄 지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6곳)를 전문실습, 창작·네트워킹 공간까지 제공하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18, 6곳 300명 → '22, 17곳 1천명)
  - 예비창업자에게 업종별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 도입(연 1만명, 예비창업자 1인당 50만원 한도, 교육비의 90% 지원)
-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17말 8,800억원)을 조기에 정리(매각·소각)하고,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하여 폐업신고,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재기교육**('19, 2.2만명)을 사회복지, 뿌리산업, 귀농·귀어 등 **유망 분야로 내실화**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자영업자 참여요건을 완화**(연매출 0.8억원 → 1.5억원 이하)하여 자영업자의 **취업준비 기회 확대**('18, 0.8 → '19, 1.5만명)

#### ④ 골목상권 지킴이 역할 강화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 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 추진  
 \* 추진(예) : (현행) 90% 수준 → ('19) 95% → ('20) 100%
-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내실화, 교통영향평가 심의 강화** 등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응**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5년)제도 본격 시행('18.12) 및 업종경쟁력 강화**
-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출점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위약금 감면 사유**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
-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22, 50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상생협력 요소 반영** 등 **상생기반 마련**

#### ⑤ 자영업자 안전망 및 복지 확대

- 관계부처(중기부, 복지부, 고용부)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타당성 검토** 추진
  - 기 시행 중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조건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 추진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2년까지 180만명으로 확대**('18, 136만명) 하고, 교육 및 취업지원기능 등을 보강
- 자영업 밀집지역 내 **어린이집, 편의시설 등 복지공간을 조성**하고 (~'22, 30개), **자영업자 삶의 질(위라벨) 지수를 개발**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 ⑥ 자영업 정책체계 혁신

-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제정하고, 중앙과 지방에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자영업 지원 기반 마련
  - 일부 지자체(17개 시·도 중 7개)에서 조례로 설치·운영 중인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지원센터를 전 지자체로 확산 추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영업 전문 부설 연구소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4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인프라 구축

### □ 이번 대책을 통해,

- '22년까지 발행할 18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8조원) 및 온누리상품권(10조원)이 자영업 점포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 지역신보 보증을 매년 1.5조원 수준으로 확대, 신기보의 자영업자 전용보증(0.6조원) 신설, 소상공인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해 '22년까지 17조원 규모의 저리자금이 공급될 전망이다.
- 정책적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 전문연구소 설립 등 자영업에 대한 독립적 정책영역을 정립하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고,
  - 창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성장(상권활성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 퇴로·재기(폐업지원센터) 등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의 기반이 마련된다.
  - 또한, 자영업자의 안전망, 복지, 삶의 질 등 '사람으로서의 자영업자'라는 관점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기를 마련하였다.
- 한편, 대책 수립 단계부터 발표까지 자영업자와 함께한 이번 대책은 앞으로 자영업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의미도 찾을 수 있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단체가 단순한 정책 건의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하여 마련하였다”면서,
  - “이제는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이번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금번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별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강신천 사무관(☎ 042-481-45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

-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

2018. 12. 20.

관계부처 합동



# 순서

I. 추진배경 및 경과 .....	1
II. 진단 및 그간의 정책 평가 .....	4
III. 정책 추진방향 .....	10
IV. 주요 정책과제 .....	11
1. 생애주기별 성장환경 조성 .....	11
1) 자영업 성장 역량 제고 .....	11
2)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	15
3) 준비된 창업 유도 .....	17
4) 원활한 재기 및 퇴로 지원 .....	18
2.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	19
3. 안전망 및 복지 확대 .....	22
4. 생활밀착형 업종별 규제완화 및 지원 .....	24
5. 자영업 정책체계 혁신 .....	26
V. 향후 추진계획 .....	27

## I. 추진배경 및 경과

### < 자영업대책 수립 필요성 >

- 그간 대기업·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은 그 과실이 서민경제에 전달되지 않아 양극화가 심해지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결과 초래
  - 우리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하며, 이를 위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가 필요
    - \* 자영업자의 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근로자와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13, 연 463만원 → '17, 연 805만원)
-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주체로서 자영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본격화 할 필요
  - 자영업은 전반적인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난 지속
    - \*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영업이익 추이(만원): ('10) 1,538 / 248 → ('15) 1,863 / 215
  - 생계형 창업,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참고]
  - 현 정부 들어 4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통해 현장의 시급한 애로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 자영업자가 성장·혁신을 통해 잘 살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체계는 아직 미흡
    - 특히, '기업' 관점의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 자기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반영한 정책 강화 필요
      - \* 대통령 말씀(7.23, 11.27) : 자영업자를 자기고용노동자 및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인식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 매출 선순환구조 구축 및 안전망 강화 등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종합대책 마련 필요

⇒ 자영업의 독립적 정책영역을 체계화하고,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 로드맵 필요

## [참고] 외부적 요인의 영향 및 자영업자 양극화

### 1 세계화·대형화·정보화의 영향

- 최근 10년간 가계소비지출이 231조원(연평균 3.9%) 증가하는 동안, 세계화·대형화·정보화 관련 지출은 102조원(연평균 8.4%) 증가
  - 해외소비 증가, 대형마트·SSM 등에 대한 가계소비 증가,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외부적 요인은 자영업자 매출에 부정적 영향

(단위 : 조원, %, 괄호 안은 소비지출 대비 비중)

구 분		'08	'11	'14	'17	연평균 증가율
가계 소비지출		561	655	713	792	3.9
세계화	해외순소비	12 (2.1%)	9 (1.4%)	8 (1.1%)	19 (2.4%)	5.2
대형화	대형마트	30	36	39	42	3.8
	백화점	20	27	29	29	4.2
	SSM	4	6	7	8	8.0
	편의점	7	10	14	23	14.1
	소계	61 (10.9%)	79 (12.1%)	89 (12.5%)	102 (12.9%)	5.9
정보화	온라인	18	32	45	66	15.5
	홈쇼핑	4	7	9	10	10.7
	소계	22 (3.9%)	39 (6.0%)	54 (7.6%)	76 (9.6%)	14.8
계		95	127	151	197	8.4

\*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가계소비지출, 해외순소비), 체인스토어협회(대형화, 정보화)

### 2 자영업자 양극화·규모화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하는 추세('08, 25.6% → '18.11, 29.5%)인 반면,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는 감소 추세(74.4% → 70.5%)

< 고용원 유무별 자영업자 수 (천명, 괄호안 비중, %) >

구 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18.11월
자영업자	6,005(100)	5,657(100)	5,720(100)	5,681(100)	5,630(100)
고용원 있는 경우	1,538(25.6)	1,526(27.0)	1,581(27.6)	1,608(28.3)	1,659(29.5)
고용원 없는 경우	4,467(74.4)	4,132(73.0)	4,139(72.4)	4,074(71.7)	3,972(70.5)

- 중형마트는 증가하는 반면, 골목슈퍼는 감소 추세

\* 중형마트(개, 165~3,000m<sup>2</sup>, 매출액) : ('10) 8,341(19.8조원) → ('16) 11,446(36.2조원)  
 골목슈퍼(개, 165m<sup>2</sup> 미만, 매출액) : ('10) 79,193(9조원) → ('16) 59,736(11조원)

## < 대책 수립 경과 >

- ◇ 자영업 협·단체로 구성된 민간 TF 구성('18.9.10 키오프 이후 5차례),
-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12개 부처(10.30~), 소상공인지원기관(3개 기관), 지자체(서울·경기·인천, 11.9~)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

### □ 현장소통 TF, 전문가 자문 등 정책과제 발굴

- '현장소통 TF'\*(9.19~10.23)를 통해 정책과제(154건) 발굴
  - \* (정부) 중기부·기재부 등, (협단체)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전국상인연합회·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한국마트협회·대한미용사회중앙회·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소상공인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기연구원
- 자영업 생애주기별 과제에 대한 심층토론 진행(총 5회\*)
  - \* ①자영업 구조혁신 과제.업종별 애로사항(9.19), ②창업(9.28), ③성장관련(10.4), ④사회적 안전망(10.17), ⑤대기업 등의 자영업시장 진출 대응(10.23)
- 5개 전문가 자문단(중기연구원·노동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토론
  - \* ①정책체계 혁신, ②창업·일자리, ③성장, ④퇴로, ⑤정책 인프라

### □ 발굴된 과제와 애로사항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10.30~)

- 행안부·고용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10.30~), 서울·경기·인천 등 우수 지자체 사례(지역사랑상품권 등) 발굴(11.9~) 등 추진

### < 자영업 협·단체가 제안하고 대책에 반영한 주요 과제 >

건의 협·단체	정책 과제
소상공인연합회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조기도입 및 활용도 제고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상권영향평가·지역협력계획서 실효성 제고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확산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자영업자가 저렴하게 이용가능한 종합물류단지 조성
한국외식업중앙회	고용보험 가입조건 완화 및 산재보험 가입업종·대상 확대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폐업지원 전담창구 설치를 통한 폐업 및 재기 원스톱 상담·지원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경쟁력 확보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
	(가칭)뷰티산업 진흥·육성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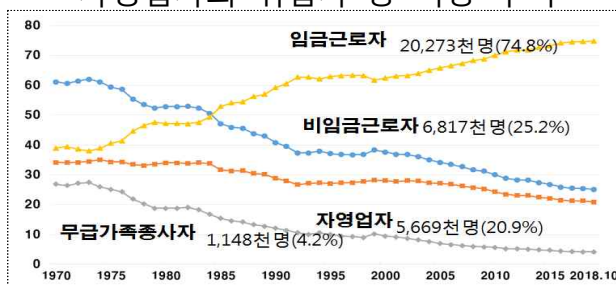
## Ⅱ. 진단 및 그간의 정책 평가

### 1 자영업 기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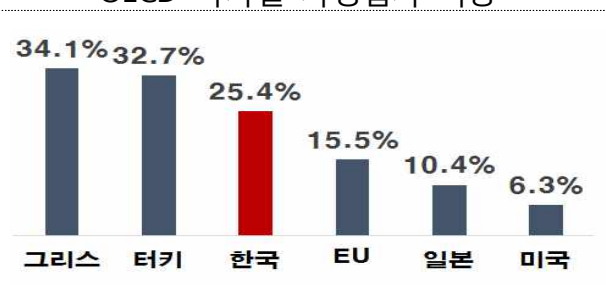
- (비중) 자영업자 수('02, 621 → '18.10, 567만명)와 비중('02, 27.9 → '18.10, 20.9%)은 감소 추세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 자영업자 비중(% , '17년,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한) 25.4 (EU) 15.5 (일) 10.4 (미) 6.3

< 자영업자의 취업자 중 비중 추이 >



< OECD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



- (업종) 도·소매, 숙박·음식, 개인서비스, 제조업 순으로 구성

(단위 : 천명, %, '18.10, 괄호안 비중)

전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기타
5,669 (100.0)	1,171 (20.7)	632 (11.2)	419 (7.4)	414 (7.3)	3,033 (53.5)

\* 기타 : 농림수산업, 광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등 16개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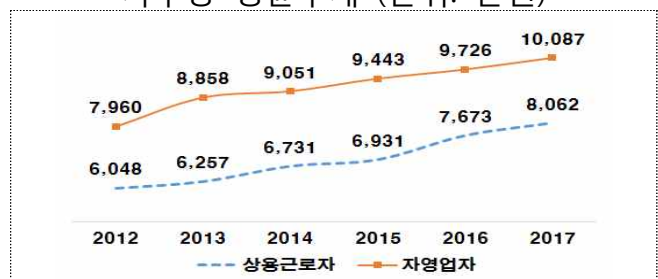
- (연령) 자영업자 평균연령은 53.2세로 40세 이하 청년층의 진입은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 퇴직 등으로 장년층 진입은 증가

\* 최근 10년간('08~'17년) 연령대별 자영업자 추이 : (30~39세) 102.5 → 73.9만명 (연평균 3.6%↓), (50세이상) 288.0 → 334.8만명(연평균 1.7%↑)

- (소득)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92만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 (608만원)의 81% 수준('18.3/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 (부채) 자영업자 가구 부채는 평균 10,087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상용근로자 (8,062만원) 대비 2,025만원이 높은 수준('17, 가계금융복지조사)

< 가구당 평균부채 (단위: 만원) >



## 2 자영업에 대한 인식과 진단

### □ (Q1) 신기술, 신업태의 등장으로 자영업의 퇴장은 어쩔 수 없다?

- 디지털 기술,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온라인쇼핑의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통적 오프라인 업태 입지 축소\*\*

\* 소매판매액 대비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 : ('17) 20.7% → ('18.3/4) 24.3%(28.7조원)

\*\* 통신판매업은 증가('14, 12.8 → '17, 18.8만개, 46.3%↑)한 반면, 오프라인 매장은 감소(예, 옷가게(-2.4%↓), 스포츠용품점(-1.9%↓), 건강보조식품 가게(-1.8%↓) 등)

- (진단) IT 혁신으로 경영환경과 소비자 문화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나 자영업계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경쟁력을 점차 상실
  - 온라인쇼핑 등 환경변화가 자영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상생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자영업계 혁신 유도 필요 (대책1-1, 2)

### □ (Q2) 수익성이 악화되어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버티고 있다?

- 자영업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영업이익은 감소 추세, 자영업자 가구 소득은 월평균 492만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608만원) 보다 116만원 낮은 수준('18. 3/4분기 가계동향조사 분석)

\* '15년 개인사업체 업체당 매출액은 '10년 대비 22.5% 증가한 208백만원, 영업이익은 8.8% 감소한 31백만원(2015 경제총조사)

- 카드수수료, 임차료 등 비용지출 증가와 함께 경영난에 따른 차입 증가(대출잔액 : '14, 372 → '18.6, 591조원),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도 상승

\* 가계대출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확대(17년 14.4% → 18.2/4분기 15.6%, 전년동기 대비), 1인당 평균 대출규모도 증가(14년 3.0억원 → 18.6월말 3.5억원)

- (진단) 임차료 등 비용증가, 고객편의를 위한 새로운 비용발생 등으로 매출 증가가 수익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
  - 매출을 늘려주는 정책을 강화하고, 자영업 비용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개발 등 모색 필요 (대책1-2)

### □ (Q3)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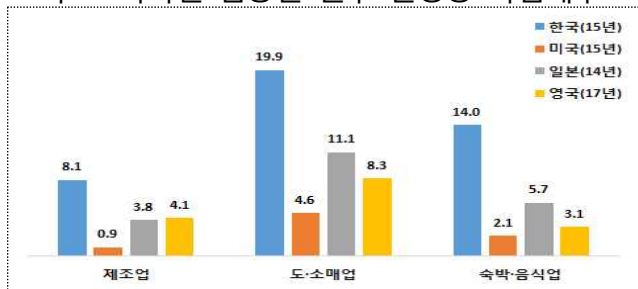
- 자영업자('18.10, 567만명)의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18.10, 20.9%)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 자영업자 비중(% '17년,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한) 25.4 (EU) 15.5 (일) 10.4 (미) 6.3

- 특히,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이 과밀

\* 자영업자 업종별 비중('18.10) :  
도소매업 20.7%, 숙박·음식업 11.2%,  
개인서비스업 7.4%, 제조업 7.3% 순

< 주요 국가별·업종별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



- (진단)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은 사회경제구조에 기인, 일자리와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 조정은 곤란
- 준비된 창업 유도, 재취업·재창업 연계 등 폐업지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적정수준의 자영업 규모를 찾아가는 접근 필요 (대책1-3, 1-4)

### □ (Q4) 자영업의 사회안전망은 본인의 몫이다?

-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5.8%('18.8)이나, 1인 자영업자의 가입률은 54% 수준

\* 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6.2%

- 또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3%\*에 불과 (정규직 근로자 85.9%)

\* '18.8월 기준, 1인 자영업자(403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2,296명

- (진단) 자영업 사회안전망은 근로자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상황, 이에 대한 전향적 접근 필요
- 단시일 내에 가능한 사회안전망은 우선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되,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설계는 면밀한 연구 후 추진 필요 (대책 3)

\*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 3 그간의 정책 평가 및 당면과제

#### < 주요 추진정책 >

#### □ 현 정부 들어 4차례의 종합대책 발표(146개 과제)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17.7) 및 보완대책('18.1),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18.7),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18.8)

-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근로장려금 등 11조원 규모의 직접지원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보전

구분	주요내용	기대효과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안정자금 지원</li> <li>* '19년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지원 확대 예정(13→15만원)</li> <li>- 고용연장지원금 지원기간 3년 연장 및 지원금액 상향('17, 18 → '20, 30만원)</li> </ul>	6조원
사회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루누리(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사업 확대</li> <li>* 최대지원율 : (1~4인 사업장) 90%, (5~9인) 80%</li> <li>- 건강보험료 경감, 고용보험료 지원 등</li> </ul>	3조원
EITC	- 근로장려금 소득·재산기준 완화	1.7조원

- 카드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인하하고, 세제 혜택을 신설·연장하는 등 비용부담 완화로 약 1.6조원 절감

구분	주요내용	기대효과
카드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영세·중소가맹점) 확대</li> <li>- 뱅크수수료 산정체계 개편(정액→정률제)</li> <li>- 수수료 상한 인하(2.5→2.3%)</li> <li>- 온라인판매업자 카드수수료 인하(3.0 → 1.8~2.3%)</li> <li>-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 적용(1.5 → 1.0%)</li> <li>-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 추가 확대</li> <li>* 5~10억원(2.05→1.4%), 10~30억원(2.21→1.6%) 등</li> </ul>	1.4조원
세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8/108→9/109), 한도(5%p) 확대</li> <li>-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500→1,000만원) 및 우대공제율(1.3%) 기간 연장('18 → '20)</li> <li>-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2,400→3,000만원)</li> <li>- 성실사업자 월세(10%), 의료비·교육비(15%) 세액공제</li> </ul>	0.2조원

- 임대차(임대료, 환산보증금, 계약갱신기간 등) 및 공정거래(가맹관계 불공정 행위 방지, 과다출점 완화 등) 분야 개선으로 안정적 경영기반 마련

구분	주요내용
임대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 9 → 5%</li> <li>- 환산보증금 상향(상가임대차 보호대상 확대 : 60~70 → 95%) * 서울의 경우 4억원 → 7.9~9.2억원</li> <li>-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 5 → 10년</li> <li>- 상가 권리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li> <li>-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li> <li>-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일부를 저가에 제공하는 '착한상가' 운영</li> </ul>
가맹점 공정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 단체 신고제 도입 및 가맹본부의 협의 개시 의무화 추진</li> <li>-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의무화 추진</li> <li>- 가맹점(편의점) 영업시간 단축요건 완화 * 심야영업시간대 : 5시간(오전 1~6시) → 7시간, 영업손실 발생기간 : 6 → 3개월</li> <li>-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없는 계약 해지시 위약금 면제 추진</li> <li>-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이종 브랜드간 출점 거리제한) 승인</li> </ul>

- 정책자금 융자·보증 등 6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금융접근성 제고

구분	주요내용	기대효과
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저금리(2% 내외) 대출 프로그램 4조원</li> <li>- 소상공인 긴급 융자자금 등 0.4조원</li> </ul>	4.4조원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신보 특례보증 1조원</li> <li>- 지역신보 보증공급 확대 1조원</li> </ul>	2조원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구분	주요내용
고용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창업 후 1년 이내 → 5년 이내)</li> <li>-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기준보수 1등급 → 1~4등급) 및 기간(2 → 3년)확대</li> </ul>
산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자영업자 가입대상 확대(7개 제조업 및 도소매·음식업 등 서비스업)</li> </ul>

- 온누리상품권 발행('18, 1.5 → '19, 2조원)과 정부·지자체의 구내식당 의무휴일제(세종청사 등)를 확대하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 확대(10 → 30% 이상)로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
-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3~7% → 최대 9%),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비용 절감

-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 부여, 노동관계법 위반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의해 주류를 제공한 판매자에게 행정처분 면제 등으로 자영업자의 권익보호 강화

## < 성과와 한계 >

- 카드수수료·세제·임대료 등 자영업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경영 애로·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한 것으로 평가
  - 최근 카드수수료 인하(11.26)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환영과 지지를 표명(소상공인연합회, 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
  - EITC, 세제혜택, 공정거래 정책 중 상당수는 '19년부터 시행되어 그 효과가 내년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나, 현장의 체감도가 아직 낮고 어려움을 지속 호소

## < 당면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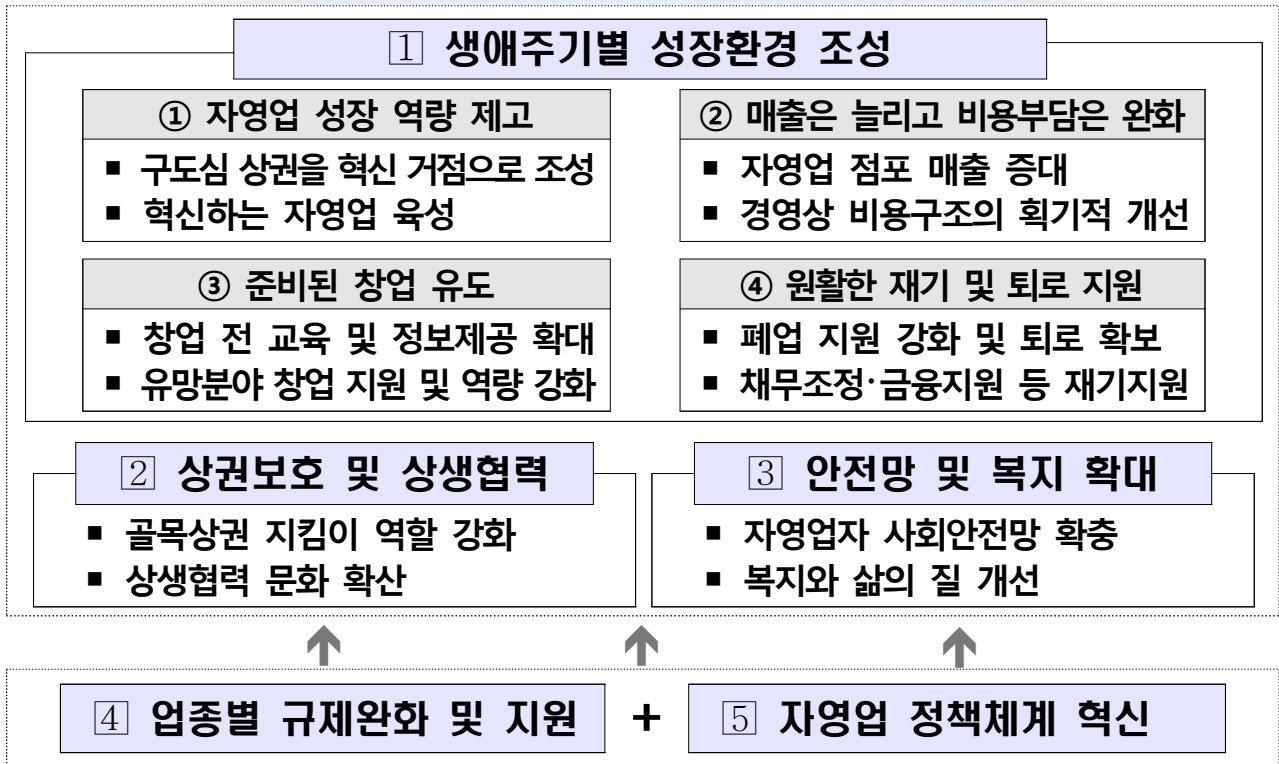
-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에 지속 반영하되, 자영업자가 성장·혁신을 통해 잘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로드맵이 필요

기 준	개 선
현장애로 해소	혁신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및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강화
경영비용 절감	비용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리는 정책 발굴에 초점
과밀해소를 위한 창업지원 축소	⇒ 준비된 창업 및 재기 지원 강화
대기업 진입 억제 및 시장 보호 중심	상생협력 성공사례 확산 및 생계형 업종 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자영업자 안전망 확충과 함께 복지와 삶의 질도 고려
정책의 부재	자영업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 정책영역 규정 및 연구기능 등 정책인프라 구축

### Ⅲ. 정책 추진방향

비전

성장·혁신하는 자영업, 잘 사는 자영업자



#### < 8대 핵심 정책과제(~'22 목표) >

- ①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 온누리상품권 10조원)
- ②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10곳 신설
- ③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 ④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
- 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 ⑥ 부실채권 0.9조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
- ⑦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  
\* 4대보험 지원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노란우산공제 180만명 가입자 확보
- ⑧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 IV. 주요 정책과제

### 1. 생애주기별 성장환경 조성

#### 1 자영업 성장 역량 제고

##### < 구도심 상권을 자영업 혁신 거점으로 조성 >

##### □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구도심 상권 복합개발)

-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하여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19, 13곳 → '22년까지 30곳 육성)

\* '18년 3곳(대구 칠성시장 주변 상권, 강진 중앙로 상점가 일원, 수원 역전 상권)을 지원 중으로, 구역당 5년간 80억원 지원(지자체 매칭)

- 상권특색이 반영된 경관을 조성하고,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힐링(지역문화·예술)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성

\* 고객중심으로 상권 특색을 살리고 상품을 구성 (예 : 관광연계 디자인 상품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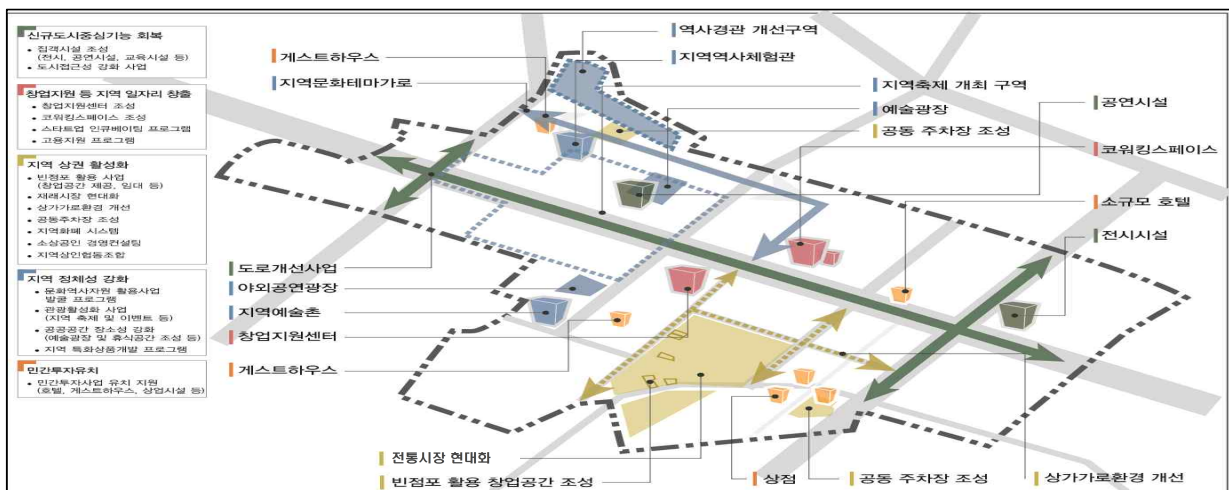
- 복합청년몰, 특성화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기존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상권 활성화 촉진

- 임대인·임차인·지역주민·지자체 등 상권 주체의 자율적인 협의체(가칭, 지역상권상생협의체)를 도입, 자율규제\* 및 상생활동\*\* 유도

\* 과당업종 선정을 통해 상권 내 입주제한 심의를 위한 규약 운영 등

\*\* (임대인) 상가임대차법령 준수 ↔ (임차인) 상권활성화 노력 ↔ (지자체) 협약 참여자 지원

< 예시 :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



- **낙후상권 활성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빈점포 매입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점포 매입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

\* 빈점포 매입 지원금액 한도 설정 후 지자체 보조 형태로 지원

- 추후 사업성과 등을 감안하여 추가 확대 검토

-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로 확대 및 안전 강화**

-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17, 72%)을 100% 수준\*으로 높이고(~'22), 주요 상권에도 공영주차장 보급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제도개선 추진\*

\* 주택가로 둘러싸인 시장 등 주차장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전 시장에 설치하고, '공공·시설 주차장 이용보조('18, 12억원)'를 통해 보완

\*\* 균특회계 주차환경개선사업 활용('19년 전국 56곳 공영주차장 건립, 645억원)

→ 지자체가 주차수요가 많은 상점가 등에 우선 예산을 반영토록 예산편성지침 개정

- 전통시장 공용구간과 개별점포의 노후화 전기설비 개선 추진 (~'22, 300개 시장) 및 화재알림시스템 설치 확대(~'22, 700개 시장)

- **생활 SOC와 연계하여 전통시장·상점가의 공유경제 가치 확산**

- 전통시장·상점가에 지원시설(소상공인지원센터) 배치 및 공용시설(공동창고, 택배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22 40곳) 설치 등 공유자산을 확대·공유

\* 노래교실, 외국어교육, 공방 등 문화 프로그램 운영(연 30곳, ~'22, 120곳)

- 전통시장 주차장을 주간에는 전통시장 고객에게, 야간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 확대

\* 지역별 주차장 관리지침에 따라 주차요금은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

## **< 혁신하는 자영업 육성 기반 조성 >**

- **소공인집적지구 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혁신환경 조성**

- 스마트제조 장비를 구축하고, 소공인의 제품개발, 공동작업장, 온라인 공동구매·판매, 전시장까지 전과정을 일괄 지원

- '19년 복합지원센터 시범 구축(2곳) 후, '22년까지 총 10개 내외로 확대

- 성장·혁신에 필요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소공인 혁신성장 우대 보증 신설(기술보증기금, '19~, 기업당 5억원 한도)



## □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추진('22년까지 1.5만명)

### ○ 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본격 발굴·육성('19~)

\* '18.8월부터 업력 30년 이상 도소매, 음식업 업체 대상으로 혁신성 평가를 통해 선정 중('18.12, 81개), '22년까지 총 1천여개 수준으로 관리하고 성공모델을 확산

\*\* 제품·서비스, 마케팅, 전문성, 혁신 경영을 통해 지속 발전을 추구하는 소상공인(4유형)

혁신 리더형	혁신 아이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경력/기술 등) 및 혁신의지 보유</li> <li>ex) 백년가게, 명문 소상공인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기술) / 서비스 품질 경쟁우위</li> <li>ex) 4차 산업기술 활용, 新사업아이템 보유</li> </ul>
혁신 마케팅형	혁신 그룹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화된 마케팅 방식으로 시장개척</li> <li>ex) 홈쇼핑 입점, 글로벌시장 개척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 네트워크 활동(조직화/협업화)</li> <li>ex)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체 구성운영</li> </ul>

- 혁신형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금리우대, O2O 플랫폼 연계 마케팅, 홈쇼핑 입점 및 집중 컨설팅 지원

- 혁신형 소상공인이 고용한 청년에 대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사업주에 대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검토('19.상)

\* 고용안정성(업력, 고용유지율 등)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기업 선정

### ○ 소상공인의 자동화설비 구축을 위해 정책자금 2,000억원 규모 우대(금리 0.2%p 인하) 지원('19)

\* 소상공인(키오스크, 자동 김밥말이 기계 등), 소상공인(봉제, 주얼리, 기계금속 등 업종)

## < 정보화·규모화·세계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

## □ 홈쇼핑 입점 및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 ○ 혁신형 소상공인 제품 등을 DB화\*하여 단계적\*\* 판로개척 지원 ('19, 500개사)

\* 혁신 제품 유통 플랫폼인 '아임스타즈'(민간 유통사 62개사의 MD 324명이 활동) 내 '혁신형 소상공인관' 신설

\*\* (1단계) 오픈마켓(G마켓, 옥션 등), 소셜커머스(위메프, 쿠팡 등), 정책매장 및 면세점 입점 → (2단계) T-커머스, V-커머스 → (3단계) TV 홈쇼핑 및 해외진출 지원

- 공영 홈쇼핑에 '소상공인 특화 방송코너\*'를 신설('19)하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연계 지원



- 소상공인 전용 **크리에이터 랩**<sup>\*</sup>(교육·커뮤니티·세트장 등)을 구축하여 1인 방송 홍보 및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운영 지원

<sup>\*</sup> 소상공인방송원(YesTV) 등에 구축하고, 장비대여 및 홈쇼핑 등 연계 판매 추진

## □ 조직화·협업화를 통한 규모의 한계 극복 지원

-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협업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규모화 촉진**(조합원 20인 이상 협동조합 : '18, 30 → '22, 150개)

<sup>\*</sup> 정책지원 대상 확대(소상공인 비중 제한 완화 : 60~80% 이상 → 50% 이상), 협동조합간 연대, 연합회 설립 지원 등 규모화 기반 마련

- **주력 업종별<sup>\*</sup> 체인형 협동조합을 전국조직화**하고, 공동구매·판매 등 **협업모델 확산 및 자금 연계지원<sup>\*\*</sup>**

<sup>\*</sup> 종사자 2만명 이상으로 전국규모화 가능성이 큰 업종 선정(예시: 동네슈퍼, 세탁소, 카센터, 제과점, 꽃집 등)

<sup>\*\*</sup> 협동조합 전용자금('19, 100억원) 대출한도 확대(조합당 5억원 → 10억원)

- 신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sup>\*</sup>**, **협업아카데미 확대**('19, 8 → '22, 17개)를 통해 조합의 협업역량 강화 및 교육인프라 확충

<sup>\*</sup> 동영상·교육과정 교재 개발, 기본·심화·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맞춤형 지원

- **중소유통물류센터(35곳)의 공동구매 등 연계를 위해 표준물류관리 시스템을 지속 확충**하여 전국 물류정보 통합연계망 구축 추진

- 자영업자가 저렴하게 이용가능한 '**종합 물류단지**' 조성<sup>\*</sup> 검토

<sup>\*</sup>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19) → 법령상 근거 등 마련('20) → 단지 조성('21)

## □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및 해외수요 발굴

- 큐텐, 카페24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여 상품 콘텐츠 번역, 글로벌 쇼핑몰 입점, 통관·물류 등 **온라인수출 실행 지원**('19, 300개사)

-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현지 인플루언서(유튜버 등) 섭외, 홍보영상 제작·배포, SNS 홍보 지원**

- **자영업 단체·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 준비,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계약 체결 등을 일괄 지원하는 '자영업 수출컨소시엄'사업 시범 도입**('19, 5개)

- **유망 프랜차이즈 수출상담회 및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연 150개사)

<sup>\*</sup> 성공사례 : (떡담) '65년 창업 → 국내 가맹점 47개로 성장 → '13년 미국 수출 10만불 돌파 및 떡담 뉴저지점 론칭

## 2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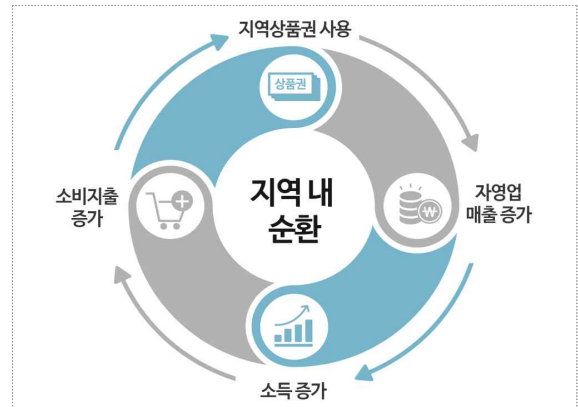
### < 돈이 도는 자영업 시장 조성 >

#### □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판매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지역(고향) 사랑상품권 발행을 5배 수준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18, 0.37조원 → '19, 2조원)하고, 법적근거 마련\*\*

\* '19년 한시적으로 발행액의 4% 지원 (특별교부세 + 국비)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제정안」('18.8) 계류 중



- 지역상품권 할인발행 지원의 성과 분석\* 등을 통한 제도개선 병행

\* 성과분석시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상품권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

- '22년까지 온누리상품권 총 10조원 규모 발행(연 2조원 이상)

- 온누리상품권 공공기관 권장구매 확대(경상경비의 1.0 → 1.5%) 및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 상향 조정(현행 30 → 40%)

#### □ 자영업 점포 사용 (가칭)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

- 상품권 할인(예, 5%)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하여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포인트제 도입·시행('19)

\* (예시) 온누리상품권 할인(5%) 대신 포인트로 지급

- 이동통신사\*, 유통대기업 등의 포인트도 국민포인트와 연계 검토\*\*

\* 이통사 포인트의 59.3%(약 5,000억원)가 사용되지 않고 소멸('17.9, 한국소비자원)

\*\* 추진일정 : ('19) 관계기관 협의 및 연구용역 → ('20) 시행

#### □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확대를 통한 주변상권 매출 증대

- 정부청사·지자체의 구내식당 의무휴무제를 지속 확대\*

\* 미시행 구내식당(정부청사·지자체 70여개소) 의무휴업 확대 및 기 시행중인 청사 월별 휴업일수 확대(월 1회 → 2회 이상)

-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고('18년 실적 평가부터), 대기업에도 권고와 협조를 요청(동반성장위원회)

## < 자영업 비용구조의 획기적 개선 >

### □ 혁신적 결제방식 도입 등 수수료부담 완화

- (제로페이) 소상공인에게 0%대 수수료율로 서비스 제공
  - \* 소상공인 중 연매출 8억원 이하(소상공인의 91.7%)는 0%, 8~12억원(4.3%)은 0.3%, 12억원 이상(4.0%)은 0.5%를 적용, 소상공인 이외의 점포는 민간 자율로 결정
-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제로페이 연계 각종 이벤트 개최\*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 유인 확대
  - \* 업종단체와 협업으로 포인트 지급 및 할인행사 등 공동마케팅 행사 추진
- (직불형 카드) 정부구매카드('17, 7,019억원)를 기존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교체, 사용을 확산하여 수수료 부담 완화(0.3%p↓)
  - \* 청와대('18.8), 법무부('18.10) 사용 의무화 → '19, 전 부처로 확산 유도

### □ 영세자영업자 자금조달 등 비용부담 완화

-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충을 위해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매년 1.5조원 내외로 확대하고, 저신용 자영업자 전용자금\* 신설('19, 100억원)
  - \*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없이 사업성만을 평가하여 융자
- 은행권 사회공헌기금을 활용(500억원)하여 신·기보 보증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자금지원(지원규모 6,000억원)
- 개인사업자 신용도 평가 전문 '자영업자 신용평가사' 제도 도입\* 및 CB사·카드사 등에게 빅데이터 컨설팅 업무 허용 추진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18.11) 정무위 계류 중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15%)를 최근 제도 개선\*의 성과를 보아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등 검토('19)
  - \* '18년 성실사업자 요건완화(복식부기 신고 → 간편장부 신고 포함, 수입금액이 직전 3개년 평균의 90% → 50%, 계속사업 3년 이상 → 2년 이상)

### 3 준비된 창업 유도

#### □ 창업 전 단계의 체계적 교육 강화(‘18, 0.1 → ‘22, 2만명)

-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사업자등록 전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 도입(‘19)
  - \* 교육비의 90%, 1인당 50만원 한도(연간 최대 2회 지원)
- 창업시에는 입지선정, 계약, 인테리어, 창업절차 등 컨설팅 지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기능을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하고, 주요 거점으로 확산(‘18, 6 → ‘22, 17개소)
  - \* 아이디어 발굴 및 예비창업자 선발 → 이론교육 및 점포체험 → 사업화자금(2천만원) 지원
- 이론교육·점포체험 외에 전문실습교육, 창작·네트워킹 공간을 추가하고, 우수 졸업생은 청년몰(‘18, 248개)과 연계 지원(‘19)

#### □ 성공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 창업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 상인정신, 실패에 따르는 책임 등 창업 성공·실패 사례를 방송 및 동영상으로 제작·배포(소상공인방송)
  - \* 세무서 사업자등록시, 음식점 위생교육시 등 창업 과정에서 시청 권고 및 교육자료로 활용
- 상권정보시스템 활용 필수화\* 및 고도화\*\*와 함께, ‘자영업 종합 포털’을 신설하여 업종·지역·부처별 정보 일괄 조회 서비스 제공
  - \* 창업지원 사업 참여시 상권정보시스템 내 ‘창업 자가진단’ 이용결과 제출 의무화
  - \*\* 상권별 환경(거주인구, 소득·소비) 및 경영현황(메뉴, 가격) 등 분석, 영업전략 제시

#### □ 생활혁신형 창업 활성화 및 컨설팅·교육 강화

- 생활주변 아이디어를 활용한 틈새시장 예비창업자에게 멘토링 및 성공불응자(성실실패시 상환면제) 지원(최대 2천만원, 연 3천명 규모)
  - \* ‘18년 6,420명 사업 신청 → 3천여명 선정·지원
- 기존 오프라인 컨설팅 방식 이외에, 스타 컨설턴트 및 성공 자영업자의 컨설팅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송출하는 방식 신설
  - \* 가칭 ‘자영업 Scale-up 서포터즈’를 구성, 컨설팅 과정을 TV·온라인·SNS 등을 통해 송출
- 배우고 싶어도 시간이 부족한 자영업자의 일·학습 병행을 위해 ‘소상공인 사이버 평생교육원’ 콘텐츠 확대(‘18, 400 → ‘22, 5,000종)

## 4 원할한 재기 및 퇴로 지원

### □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을 통한 재기 지원

-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17.말 8,800억원)을 조기에 정리\*(매각·소각)하고,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 '19년까지 4,800억원을 캠프 매각 등 정리하고, '21년까지 4,000억원 조기 정리

\*\* (연체 우려 차주) '상시 채무조정제도' 도입 → (연체 중인 차주) 채무감면을 확대('17, 29% → '22, 40%이상) → (변제능력 상실 차주) 성실상환시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 도입

- 임대차계약 만료 이전 폐업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저금리 단기자금 공급('19, 200억원)

\* (대상) 폐업예정자, 잔여 계약기간 1년 미만,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내의 임차인, (조건)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1억원 한도, 금리 3.0%

### □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폐업 및 재기 원스톱 상담·지원

-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60개, 전담인력 2명), 폐업 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12), 시행령 개정 추진('19.상)

- 폐업신고(행정·세무·금융 등), 사업정리(철거·원상복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심리치료 및 사회적 자신감 회복 지원\*\*

\* ('18) 500개사 최대 100만원 → ('19) 2,000개사 최대 200만원

\*\* 폐업자영업자를 위한 힐링캠프 지원 확대 : '18, 60 → '19, 200명

### □ 취업준비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퇴로 확보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재기교육('19, 2.2만명)을 사회복지, 뿌리산업, 귀농·귀어\* 등 유망 분야로 내실화

\* 귀농·귀어 교육·실습 제공('19, 3,900명) 및 귀농인의 집 확대('18, 275 → '19, 345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18, 5 → '22, 10개)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자영업자 참여요건을 완화(연매출 0.8억원 → 1.5억원 이하)하여 자영업자의 취업준비 기회 확대('18, 0.8 → '19, 1.5만명)

- 중장년(40세 이상) 대상 경력진단, 진로설계 등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확대하여 체계적인 인생 3모작 준비 지원('18, 2.5 → '19, 3만명)

## 2.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 < 골목상권 지킴이 역할 강화 >

#### □ 상가임차인 권리보호 범위 확대

-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 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

\* 추진(예) : (현행) 90% 수준 → ('19) 95% → ('20) 100%

-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목적물의 **원상회복** 시점에 대한 표준규정을 추가하여, 분쟁 발생 사전 예방

\* 실태조사('19.상) → 표준계약서에 원상회복 표준규정 추가(법무부)

#### □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 방지

-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영업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홍익표의원 발의, '18.1.23)의 **조속한 통과 노력**

\* 등록(입지)제한 가능지역 확대(전통시장+상점가 1km 이내),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월2회 휴무), 상권영향평가 대상업종 확대 및 작성주체 변경,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력 제고

- 법개정 전, 하위법령을 통해 우선 시행

- ① **상권영향평가서 내실화** : 지역경제, 고용 등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항목 세분화 등 **상권영향평가서 작성기준·방법 보완**

\* 향후 일정(안) : 연구용역('18.11~12)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19.상)

- ② **교통영향평가심의 강화** :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교통유발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와 분리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운영**

\* (현행)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중 교통전문가 1/4 참여) → (개선)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

\* 교통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용역(~'19.4) →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19.하)

- ③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이미 등록된 대규모점포 안에 **준대규모 점포\***가 입점하는 경우에도 별도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개선

\*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등록('18.7 법령해석 변경)

##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자생력 제고

- 생계형 적합업종법 시행('18.12.13)에 따라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19.하)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보호

\* (신청) 소상공인단체 → (추천) 동반성장위원회 → (지정·고시) 중기부 심의위  
(심의기준) 업종 내 소상공인 비율, 무급가족 종사자수, 평균 급여 등 고려

- 생계형 적합업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업종별 경쟁력 진단\*을 통해 핵심 및 공동사업 발굴·지원('19, 25개)

\* 업종별 PM, 전문가, 연구계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업종 진단 및 과제발굴·기획

## □ 사업조정제도 개선을 통한 자영업 권익보호 확대

- '중소기업단체'로 제한된 사업조정 신청을 단체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지역의 동일업종 1/3 이상 동의시 신청 가능토록 개선

\* (현행) 중소기업단체만 신청원칙, 단체가 없는 경우 1/3이상 동의로 가능→  
(개선) 중소기업단체만 신청원칙, 단체가 없거나 대표성 부족시 1/3이상 동의로 가능

- 사업조정 권고범위를 사업개시, 사업축소(생산품목·수량·시설)에서 '판매·마케팅 제한'까지 확대

\* (현행 법령) 제조업 위주의 규정 → (개선) 유통·서비스업 등에도 적용

## □ 가맹·대리점 분야 등 분쟁조정 활성화

- 지방 소재 가맹점·대리점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현재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설치 준비 중으로, 법령상 조정이 가능한 모든 분쟁에 대해 조정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도급·유통 분야에도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추진

\* 주요 분쟁조정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협의회의 권한·절차 등 규정

-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자체 분쟁조정 기능 지원을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조직·인원 확대 추진

\* 최근 3년간('15~'17) 분쟁조정 접수건수 51.4% 증가, 평균 처리일수 8일 추가

- 가맹본부의 법률 위반혐의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맹분야 음부즈만 제도 확대 (외식업 → 도소매·서비스업 등)



## < 상생협력 문화 확산 >

### □ O2O기업, 온라인포털과 자영업자 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 고객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O2O 사업자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상생협력 유도

\* 정부지원 : 교육장 대여,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의 80% 지원

#### 사 례

- 배달 앱 O2O 사업자 B사는 '14년부터 소상공인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비트렌드 분석, 성공비결, 마케팅 방법 등 교육(총 4,300여명)

- 소상공인 협·단체가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는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통합 신고창구\*\*' 운영

\* 소상공인, 자영업자 협·단체와 O2O사업자로 구성된 '공정거래 협의체(가칭)' 운영

\*\* 현행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활용

### □ 가맹 분야 상생협력 기반 마련

-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수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집중 육성하여 동반성장 유도(~'22, 50개)

\* 프랜차이즈 육성사업('18년 10개를 선정 1곳당 1억원 한도 지원) 활용

- 가맹본부가 상생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도록 상생협력 노력\*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평가요소로 반영

\* (평가요소 추가)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한 정도, 점주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기간의 정도, 구입 강제품목 축소 정도

-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출점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위약금 감면 사유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

\* 6개 편의점 본사(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 소속 가맹점 38,000여 개 대상(전체 편의점의 96%)

- 가맹점주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대리점·유사가맹점 등 설치를 금지

- 가맹희망자의 창업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차액가맹금(가맹본부의 유통마진) 관련 사항 정보공개서 기재 의무화

\*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1곳당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 대기업·공공기관·대학과 협력 생태계 조성

-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에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 포함('19)

\* (예시) 온누리상품권,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등

### 사 례

- 송정역시장 : 현대카드-광주 프로젝트를 통해 송정역 시장의 디자인과 브랜드화로 일평균 방문객 증가(200→4,300명), 공실률 감소(34.5→3.6%)
- 당진어시장 : 이마트 노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장난감도서관 설치 등으로 일방문고객 40% 이상 증가, 이마트 노브랜드 고객 중 25% 시장 방문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지역사회 공헌도' 추가 및 '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상생협력 노력 평가

\*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항목의 세부 평가지표에 '지역사회 공헌도(1점)' 추가('19)

- (대학) 지역문화 특성화, 디자인 개발 등 지역 협업 프로그램 도입·확산

\* '19년,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 '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반영 검토

## 3. 안전망 및 복지 확대

### <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

#### □ 노란우산공제를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

- 지자체별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매칭\*,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제가입률 확대('18, 136 → '22, 180만명)

\* 현재 서울시, 울산시, 광주시, 제주시, 경남에서 신규가입자 장려금(1만원 내외) 지원 중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교육·컨설팅\* 및 취업연계 지원 프로그램\*\* 신설('19)

\* 법무·세무 등 경영지식, 정부정책 활용 안내 등 역량 강화

\*\*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상담 등 교육 후 업종별 조합 등과 연계하여 취업 지원

## □ 1인 자영업자 4대보험 지원기반 마련

- (고용보험) 가입조건 완화(창업후 5년 이내 → 폐지), 체납시 자동해지 기간 연장(3 → 6개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추진
- (산재보험) 1인 자영업자 가입 가능업종(제조업 등 일부)을 전 업종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추진
  - \* 재해입증가능성, 수급관리 방안, 재정소요 추계 등 연구용역('19) 후 추진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타당성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중기부, 복지부, 고용부) 연구용역(지원대상 기준 마련, 비용 추계 등) 추진('19)

## < 복지와 삶의 질 개선 >

## □ 자영업 밀집지역 내 '자영업 맞춤형 어린이집' 등 복지공간 조성

- 주민센터, 빈점포 등 유휴공간을 자영업자의 복지·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상권활성화 추진 지역 중심)

\* 설치계획 : ('19 시범) 3개 내외 → ('20) 10개 → ('21) 20개 → ('22) 30개



- (어린이집) 자영업자를 위해 상점가, 상권 인근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중기부, 지자체, 복지부, 행안부 협업)

\* 자영업자 한 달 평균휴무일 3일, 주당 근로시간 68.7시간('18.3, 중기중앙회)

- (편의시설) 카페, 장난감도서관, 동아리 활동 등 자영업자와 지역 주민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역할

- 복지공간 관리·종사 인력은 폐업(예정) 자영업자 중 사회복지 분야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중심으로 채용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기교육 수료자가 사회복지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증 취득과정과 연계('19.상)

## □ 자영업자 워라밸 증진

- 자영업자 삶의 질(워라밸) 지수\*를 개발하여 자영업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에 활용

\* '19년 연구용역을 통해 지표를 개발, '20년부터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반영 조사·공표  
- (사례) '농어업인의 삶의 질 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지표, 서울시 시민행복지수 등

## 4. 생활밀착형 업종별 규제완화 및 지원

### < 업종별 규제완화 >

- ▶ **미용업** : ‘(가칭)뷰티산업 진흥·육성법’ 제정을 추진하여 미용업의 육성·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의 지정·규격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운영**
- ▶ **외식업** : 대리수강 방지를 위한 본인 인증 절차 강화 및 온라인 교육 평가 제도 도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간 복합매장(shop-in-shop) 허용요건 완화\*  
\* (현행) 벽, 층으로 분리 → (개선) 선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분·구획
- ▶ **식료품업** : 영세자영업자 HACCP 인증시 컨설팅 및 자금 등 우대 지원
- ▶ **광고업** : 벽면이용 간판 설치 층수 완화(3층 이하 → 5층 이하)  
\* 행안부 표준조례안 개정
- ▶ **관광업** : 여행업 관련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가칭)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및 관광공연장업 무대 기준\*\* 완화  
\* 일반여행업(2→1억원), 국외여행업(6→3천만원), 국내여행업(3→1.5천만원)  
\*\* 관광공연장업 등록 무대면적 기준 요구(실내공연장(100㎡), 실외공연장(70㎡))
- ▶ **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 하향조정  
\* ‘19년에는 70% 수준으로 경감하고, 이에 따른 업체 수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각 업계 의견 수렴 후 추가 경감 추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 **택배업** : 물류신고센터를 설치(‘19.3)하여 분쟁 조정 원활화, 참고원가제\*를 도입(‘20년 도입, ‘21년 시행)하여 택배기사 근로여건 개선(배송수수료 인상)  
\* 화주·운수업체 등이 운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화물차 안전운송원가’를 산정하여 공표
- ▶ **자동차 정비업** : 전구교환, 타이어펍크 수리 등 소액 단순작업의 경우 견적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생략 가능하도록 개선
- ▶ **LPG판매업·운반차** : LPG판매사업자 공급범위 확대(3톤 미만 → 10톤이하), 폐차·매각 등으로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 변경등록에 필요한 소요기간 반영(즉시신고 → 30일 이내)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9)
- ▶ **PC방, 노래연습장** :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게임산업진흥·음악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현행) 사업자등록증 분실시 재발급해서 제출 → (개선) 분실 사유서 작성시 허용  
- PC방 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장 설치기준 구체화(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 (현행) 허가관청은 “투명 유리”로 된 창만을 설치 요구 → (개선)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으로 구체화

### < 업종별 지원 >

#### < 외식서비스업 분야 >

- ▶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등 **조직화\*** 및 **공동사업\*\*** 지원 확대  
\*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 : ‘18, 20 → ‘19, 50개소  
\*\* (사례) 안산 대부도 칼국수 지구 :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조직화되어 국산 밀을 쌀국수로 가공하여 회원에게 공급하는 협동조합으로 발전  
- **포스몰\* 거래 활성화**(수수료 인하 등 추진)를 통한 식재료 조달비용 절감  
\* 포스몰(POS-Mall) : 식당에서 구매·판매·재고를 관리하는 POS단말기와 연계한 사이버 거래소

- 
- ▶ 외식업 설비가 갖춰진 사업장에서 매장운영 실전경험과 컨설팅 지원을 받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역 위주로 확대**(‘19, 5개소)

\* 현재 서울2개소, 경기1, 전북1, 전남1 이 운영 중이며, 강원, 충청, 경상권 확대

- 
- ▶ 외식업 자영업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준비단계) 해외진출아카데미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진출단계) 해외 주요 거점별 안테나숍(3~4개, 푸드코트 형태) → (확산단계) 현장지원 전담조직 및 코디네이터 배치

- 
- ▶ 외식업체 **소규모·무담보 대출 지원 확대**(‘18. 74 → ‘19. 100억원)

\* 지원금리 : (고정) 일반업체 3.0%, 농업경영체 2.5%, (변동) 2% 내외

---

#### < 관광서비스업 분야 >

- 
- ▶ ‘(가칭)지역관광혁신지원센터’를 시범 신설(1곳)하여 소규모 관광업 창업부터 금융, 경영, 일자리까지 **일괄 지원**

- 해양레저관광업 창업지원 행정시스템\* 구축, 사업화 자금 및 인큐베이팅\*\* 지원

\* 창업 행정정보 관리 및 레저선박 입출항 지원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18.8~‘19.3, 2억원)

\*\* 지정 컨설턴트 운영, 관광공사 창업 교육 제공, 창업자 네트워크 구축 등

- 
- ▶ **마리나 정비면허·정비업 신설\***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해수부-고용부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자동차정비시간 연계 강화를 위해 자동차정비사가 자격시험 응시시 가점 부여

---

#### < 공예 분야 >

- 
- ▶ 공예기술 전수 및 공방운영 등 실무지식을 배우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19, 150명) 및 **‘공예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 공예가 활동공간 제공, 기술교육 및 생산, 공방 경영, 인재양성 등 지원

- 공예주간 운영(수도권, 지역 3곳), B2B 구매 시스템 마련, 해외 주요 공예페어 참가(미국·영국·프랑스 등), 공예전 개최(연 5회) 등 추진

---

#### < 어업 분야 >

- 
- ▶ 노량진 수산시장(‘07~‘19, 총 2,241억원) 및 부산공동어시장(‘15~‘22, 총 1,729억원) 현대화를 통해 **소매상인·중도매인 사업 환경 개선**

---

#### < 지역서점 분야 >

- 
- ▶ **지역서점의 문화활동\***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서점을 주민의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 교류의 터전으로 조성

\* 저자 초청 특강, 독서동아리 운영, 작은 음악회, 시낭송, 구연동화, 지역 문화행사 등

-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확산\*** 및 **생활문화시설 지정** 추진을 통해 지역서점 지원근거 마련 및 이미지 개선

\* 미 제정 6개 광역지자체(대전, 세종, 경남, 충북, 충남, 강원) 제정 유도

- **소형서점용 POS 보급**(‘19, 300개) 및 **지역 서점 POS 연계·구축**(지역서점 포털 : 서점ON) 참여 확대 등 **정보화 및 공동구매 기반 마련**

- 
- ▶ **서비스표준 : 소상공인이 주로 애로를 겪거나 간과하기 쉬운 업무 프로세스\***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 ‘서비스 표준’ 개발·보급

\* 고객응대, 품질관리, 고객불만처리 및 피해 처리방법 등

## 5. 자영업 정책체계 혁신

### □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 소상공인, 자영업(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유사한 의미를 지칭하는 개념이나, 정의·목적·집계방식 등이 달라 정책혼선 및 사각지대 초래
  - \* 법적 지원근거가 있는 개념은 소상공인인 반면, 사회통념상 인식은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3자를 포괄하는 정책영역 부재
- 자영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 정립 및 법제화방안을 마련하여 ('19.상, 연구용역), 정책지원 및 보호·육성의 근거 마련 추진('19.하)
  - \*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주요내용(안) : 개념 및 정의, 종합계획 수립, 자영업 정책 협의회 구성·운영,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및 협력, 소상공인·자영업 지원·보호 등 시책의 개괄적 내용, 실태조사 등 통계 관련 규정

### □ 자영업 정책 협의체 구축·운영

- (중앙)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자영업 정책 관계부처 협의체 (가칭 '자영업 정책 협의회') 구성\* ('19.상)
  - \* (위원장) 중기부 장관, (위원) 관계부처 차관급
  -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업종별 자영업 정책 및 지원사업을 조정·연계하고, 사각지대 해소 등 정책효율성 제고
- (지방)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활용하여 지자체와의 자영업 정책 협력 및 소통을 강화('19.상)
  - \* 위원장(중기부장관)을 포함한 17개 광역지자체 시·도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구성 ('18.7 신설, 연 2회 정기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지자체 합동평가(행안부)에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세부지표를 개발·신설('19년 평가부터 반영)

### □ 지자체별 자영업 전담조직으로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등 설치 확산

- 현재 일부 지자체(17개 시·도 중 7개)에서 조례로 설치·운영 중인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지원센터를 전 지자체로 확산
  - 분쟁조정(임대차, 가맹사업 등), 경영자문·교육, 폐업 및 취업 지원 등 지역단위 자영업 지원 거점 역할 수행



## □ 자영업 정책 인프라 보강

- (현장소통) 현장-정책당국간 핫라인 신설 → ‘민-관 현장소통 TF’ 정기적(분기) 운영(‘19.상)
- (정책연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소상공인·자영업 부설 정책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현황분석 및 정책개발 기반 확충(‘20)
  - (가칭)‘자영업비즈니스모델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자영업자에 업종별 동향, 유망 아이템, 경영 성공·실패사례 분석, 교육 등을 지원
  - \* 자영업 관련 협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설연구센터로 설립 추진
- (통계) 통계 개발 또는 기존 관련 통계\*의 재편·조정 등 자영업 관련 통계를 정비(‘19)
  - \* (예시) 국세통계조사(국세청),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통계청), 기업등록부(통계청), 소상공인실태조사(중기부) 등
- (예산)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예산\*을 ‘22년까지 4조원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충
- \* 소진기금 예산(본예산 기준) : (‘18) 2.07조원 → (‘19) 2.61조원 → (‘22) 4조원

## V. 향후 추진계획

- 다양한 장·단기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제 관리 및 집행 점검에 만전
  -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19년 신설하는 ‘자영업 정책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과제 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
  - \* 특히, 법 개정 및 재정 수반과제는 관계기관 협조 강화 등 중점 관리
- 자영업자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집중 홍보하는 한편,
  - ‘민관 현장소통 TF’ 운영 등 자영업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추진하여 현장 상황에 따라 업종별·분야별 세부대책을 적시에 마련·발표



## 참고1

## 자영업자·소상공인·자영업 개념 구분

- (자영업자) 임금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기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 1인 자영업자(고용원 無)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OECD는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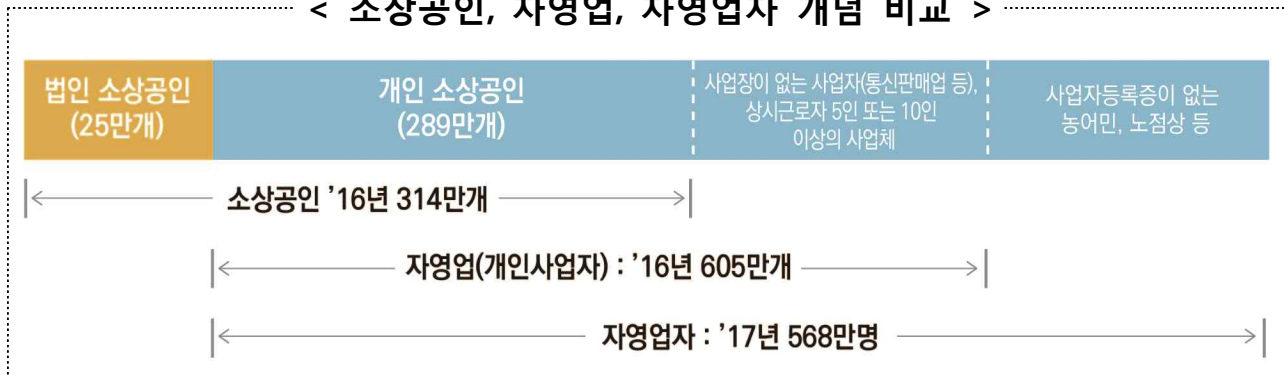
-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120억원 이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개인사업자) 사업장 유무 및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업체(자영업)

### < 소상공인, 자영업, 자영업자 개념 비교 >



\* 개인사업자는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경우 등 중복 포함

구 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자영업)
정의	○ 근로자 고용 또는 자기 혼자 사업하는 사람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기업	○ 사업등록자 중 개인사업자
현황	○ 자영업자 '17년 568만명	○ 사업체 '16년 314만개	○ 사업자 '16년 605만명
법적근거	○ 없음	○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 부가가치세법
통계산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16)
조사방법	○ 조사통계(면접조사)	○ 조사통계(면접조사)	○ 행정통계(행정자료)
조사대상	○ 표본 추출 (3만명 내외)	○ 전수조사	○ 전수조사
특징	○ 사업자등록증 보유(법인 제외) 또는 무등록사업자 ○ 사업장 보유 여부, 매출, 상시근로자 규모와 무관	○ 사업자 등록증 보유 기업 (개인+법인) ○ 상시근로자(5~10인) 및 매출(10~120억) 상한	○ 사업자 등록증 보유 (법인제외) ○ 사업장 보유 여부, 매출, 상시근로자 규모와 무관
차이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민, 노점상 등 포함	○ 법인사업자 포함	○ 근로자가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포함

## 참고2

## 과제별 추진일정

번호	과제 내용	조치법령	추진 일정	소관 부처
<b>1. 생애주기별 성장환경 조성</b>				
<b>1) 자영업 성장 역량 제고</b>				
1-1-1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 ('19) 13 → ('22) 30곳(누적)		'19	중기부
1-1-2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확대 : ('17) 72% → ('22) 100%		'19	중기부
1-1-3	공영주차장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19	국토부
1-1-4	전통시장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 노후시설 정비 : 전기설비('22, 300개 시장), 화재알림시스템('22, 700개 시장)		'19	중기부
1-1-5	생활 SOC와 연계한 전통시장·상점가 공유경제 가치 확산		'19	중기부
1-1-6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 ('19) 2 → ('22) 10개소(누적)		'19	중기부
1-1-7	소공인 혁신성장 우대보증 신설 : '19~, 기업당 5억한도		'19	중기부
1-1-8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 '22년까지 1.5만명(누적)		'19	중기부
1-1-9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검토		'19	고용부
1-1-10	자동화설비 구축을 위한 정책자금 우대 지원 : 2,000억원, 금리 0.2%p 인하		'19	중기부
1-1-11	홈쇼핑 입점 및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19	중기부
1-1-12	협동조합의 규모화 촉진 : '18, 30개 → '22, 150개		'19	중기부
1-1-13	협동조합 정책지원 대상 확대 및 규모화 기반 마련		'19	중기부
1-1-14	주력 업종별 체인형 협동조합 전국조직화		'19	중기부
1-1-15	신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협업아카데미 확대		'19	중기부
1-1-16	전국 물류정보 통합연계망 구축		'19	중기부
1-1-17	종합물류단지 조성 : ('19) 연구용역 → ('21) 단지 조성	물류시설법 개정	'21	국토부
1-1-18	온라인수출 실행 지원 : '19, 300개사		'19	중기부
1-1-19	자영업 수출컨소시엄사업 시범도입 : '19, 5개		'19	중기부
<b>2)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b>				
1-2-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 ('18) 0.37 → ('19) 2조원		'19	행안부, 지자체
1-2-2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22년까지 10조원(누적)		'19	중기부
1-2-3	온누리상품권 공공기관 권장구매 확대 : 현행 경상경비의 1.0% → 1.5%		'19	기재부
1-2-4	공무원복지포인트 온누리상품권 지급 비율 상향조정 : 30 → 40%		'19	인사처
1-2-5	자영업 점포 사용 (가칭)국민포인트제 도입		'19	중기부
1-2-6	정부청사·지자체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확대 : 월 1 → 2회 이상		'19	행안부
1-2-7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동반성장평가 반영		'19	동반위
1-2-8	0%대 수수료율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로페이 도입	소상공인법, 조특법 개정	'19	중기부, 서울시, 기재부
1-2-9	정부구매카드를 신용카드에서 직불형카드로 교체		'19	기재부, 관계부처
1-2-10	지역신보 보증규모 확대 : 매년 1~2조원		'19	중기부
1-2-11	저신용 자영업자 전용자금 신설 : '19, 100억원		'19	중기부
1-2-12	사회공헌기금 활용 신·기보 보증 자금지원		'19	금융위

번호	과제 내용	조치법령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2-13	자영업자 신용평가사 제도 도입	신용정보법 개정	'19	금융위
1-2-14	빅데이터 컨설팅 업무 허용	신용정보법 개정	'19	금융위
1-2-15	성실사업자 의료·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검토		'19	기재부
<b>3) 준비된 창업 유도</b>				
1-3-1	튼튼창업프로그램 도입		'19	중기부
1-3-2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개편 : (‘18) 6개소 → (‘22) 17개소		'19	중기부
1-3-3	소상공인방송 운영 : 창업 성공·실패 사례 방송 등		'19	중기부
1-3-4	상권정보시스템 활용 필수화 및 고도화		'19	중기부
1-3-5	자영업 종합 포털 신설		'19	중기부
1-3-6	틈새시장 예비창업자 멘토링 및 성공불용자 지원		'19	중기부
1-3-7	동영상 송출 방식의 컨설팅 제공		'19	중기부
1-3-8	소상공인 사이버 평생교육원 콘텐츠 확대 : (‘18) 400 → (‘22) 5,000종		'19	중기부
<b>4) 원활한 재기 및 퇴로 지원</b>				
1-4-1	지역신보 보유 부실채권 조기 정리 : (‘19) 4,800 → (‘21) 8,800(누적)		'19	중기부
1-4-2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19	금융위
1-4-3	임차보증금 미반환 폐업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단기 자금 공급 : '19, 200억원		'19	중기부
1-4-4	폐업지원 전담창구 신설(‘20, 폐업지원센터) 및 폐업 과정 및 사후관리 일괄 지원(‘19, 희망리턴패키지)		'19	중기부
1-4-5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힐링캠프 운영 확대 : (‘18) 60 → (‘19) 200명		'19	중기부
1-4-6	귀농·귀어 교육·실습 제공 : '19, 3,900명		'19	농식품부 해수부
1-4-7	귀농의 집 확대 : (‘18) 275 → (‘19) 345개		'19	농식품부
1-4-8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 : (‘18) 5 → (‘22) 10개소		'19	해수부
1-4-9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요건 완화 : 연매출 0.8 → 1.5억원 이하		'19	고용부
1-4-10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확대 : (‘18) 2.5 → (‘19) 3만명		'19	고용부
<b>2.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b>				
<b>1) 골목상권 지킴이 역할 강화</b>				
2-1-1	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 : (‘18) 90% 수준 → (‘19) 95% → (‘20) 100%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19	법무부
2-1-2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및 퇴거보상 인정	상가임대차법 개정	'19	법무부
2-1-3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원상회복 표준규정 추가		'19	법무부
2-1-4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유통발전법 개정	'19	산업부
2-1-5	상권영향평가서 내실화	유통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19	산업부
2-1-6	대규모 교통유발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심의 강화		'19	국토부
2-1-7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등록절차 개선		'19	산업부
2-1-8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19	중기부
2-1-9	생계형 적합업종 자생력 제고		'19	중기부
2-1-10	사업조정제도 개선	상생법 개정	'19	중기부

번호	과제 내용	조치법령	추진 일정	소관 부처
2-1-11	가맹·대리점 분야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확산		'19	공정위
2-1-12	분쟁조정조정협의회 설치 분야 확대 : 가맹·대리점 → 하도급·유통 분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19	공정위
2-1-13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 확대 : 외식업 → 도소매· 서비스업 등		'19	공정위
<b>2) 상생협력 문화 확산</b>				
2-2-1	O2O 기업, 온라인포털과 자영업자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 통합 신고창구 운영 등		'19	중기부
2-2-2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집중 육성		'19	중기부
2-2-3	가맹본부의 상생문화 자율 동참 유도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평가요소로 반영 등		'19	공정위
2-2-4	편의점 출점 기준 이행 여부 서면실태조사 및 표준 가맹계약서 위약금 감면사유 반영		'19	공정위
2-2-5	가맹점 영업지역 내 대리점·유사가맹점 등 설치 금지		'19	공정위
2-2-6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 정보공개서 기재 의무화		'19	공정위
2-2-7	동반성장지수에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 포함		'19	중기부
2-2-8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지역사회 공헌도 추가		'19	중기부
2-2-9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지역사회 공헌도 반영 검토		'21	교육부
<b>3. 안전망 및 복지 확대</b>				
<b>1)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b>				
3-1-1	지자체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 : (‘18) 136 → (‘22) 180만명		'19	중기부
3-1-2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교육·컨설팅·취업연계 지원		'19	중기부
3-1-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완화 : 창업후 5년 이내 → 폐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	'19	고용부
3-1-4	고용보험 체납시 자동해지 기간 연장 : 3 → 6개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	'19	고용부
3-1-5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19	중기부
3-1-6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가능업종 및 대상 확대 : 제조업 등 일부 → 전체업종,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19	고용부
3-1-7	1인 자영업자 보험 지원 연구용역 추진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지원대상 기준, 비용추계 등		'19	중기부
<b>2) 복지와 삶의 질 개선</b>				
3-2-1	자영업 밀집지역내 복지공간 조성 : (‘19 시범) 3 내외 → (‘22) 30개		'19	중기부
3-2-2	자영업자 워라벨 지수 개발		'19	중기부
<b>4. 생활밀착형 업종별 규제완화 및 지원</b>				
4-1	(가칭)뷰티산업 진흥·육성법 제정 추진		'19	복지부
4-2	미용기기 지정·규격 논의 별도 위원회 구성·운영		'19	복지부
4-3	온라인 위생교육 내실화 : 본인인증절차 강화 등		'19	식약처
4-4	복수사업자 복합매장 허용요건 완화		'19	식약처
4-5	HACCP 인증에 대한 컨설팅, 자금 우대 지원		'19	식약처
4-6	벽면이용 간판의 설치(층수) 규제 완화		'19	행안부
4-7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및 관광공연장업 무대 기준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9	문체부

번호	과제 내용	조치법령	추진 일정	소관 부처
4-8	실내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 자본금 기준 하향 조정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19	국토부
4-9	택배관련 운송주체간 분쟁해결 지원 : 물류신고센터 설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19	국토부
4-10	택배기사 근로여건 개선 : 참고원가제 도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20	국토부
4-11	자동차 단순정비(점검) 서류 간소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9	국토부
4-12	LPG판매사업자의 공급가능 범위 확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개정	'19	산업부
4-13	LPG운반차 변경등록 소요기간 반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9	산업부
4-14	PC방·노래연습장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게임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9	문화부
4-15	PC방 시설기준 완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19	문화부
4-16	외식업 조직화 및 공동사업 지원 확대		'19	농식품부
4-17	포스몰(POS-Mall) 거래 활성화 : 수수료 인하 등		'19	농식품부
4-18	외식업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및 지역 위주로 확대		'19	농식품부
4-19	외식업 해외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19	농식품부
4-20	외식업체 소규모·무담보 대출 확대 : ( '18 ) 74 → ( '19 ) 100억원		'19	농식품부
4-21	(가칭)지역관광혁신센터 신설		'19	문화부
4-22	해양레저관광업 창업지원		'19	해수부
4-23	마리나 정비면허·정비업 신설		'19	해수부
4-24	공예분야 인터넷 프로그램 운영		'19	문화부
4-25	공예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19	문화부
4-26	공예 한류문화 확산 : 공예주간 운영 등		'19	문화부
4-27	어시장 현대화 : 노량진 수산시장, 부산공동어시장		'19	해수부
4-28	지역서점의 문화활동 지원 확대		'19	문화부
4-29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확산 및 생활문화시설 지정 촉진		'19	문화부
4-30	소형서점용 POS 보급 및 지역서점 POS 연계·구축 확대		'19	문화부
4-31	업종별 서비스 표준 개발·보급		'19	산업부
<b>5. 자영업 정책체계 혁신</b>				
5-1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 연구용역 추진		'19	중기부
5-2	자영업 정책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19	중기부
5-3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 활용 지자체 협력·소통 강화		'19	중기부
5-4	지자체 합동평가에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세부지표 개발·신설		'19	중기부
5-5	지자체별 자영업 전담조직 설치 확산		'19	중기부, 관계부처
5-6	현장·정책당국간 핫라인 신설		'19	중기부
5-7	소상공인·자영업 전문 부설연구기관 신설		'20	중기부
5-8	(가칭)자영업비즈니스모델연구센터 설립		'20	중기부
5-9	자영업 통계기반 구축		'19	중기부, 관계부처
5-10	소진기금 단계적 확충 : ( '19 ) 2.61 → ( '22 ) 4조원		'19	중기부